

2004년 조달청인쇄기준 요금 전년과 동일

2004년에 적용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이 전년과 동일하게 결정됐다. 그러나 그동안 조판 및 제판(원색분해)을 구분하여 계산하던 방식에서 전자조판 및 편집료로 개편하고 색분해(스캔비)비용을 포함시켰다. 필름 출력비는 시중 가격을 근거로 책정됐다.

인쇄가동률 12개월 연속 60%대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내수경기 장기 침체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12개월 연속 60%대의 저조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중소기업체 1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월중 중소기업체의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이 전월 및 전년 동월대비 각각 2.5%p와 3.2%p 떨어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체 평균가동률은 지난해 2월부터 12개월 연속 정상가동률(80%)을 밑도는 60%대에 머물렀다. 인쇄업종은 67.3%를 기록했다.

전 업종이 80% 미만을 기록한 가운데 기타운송장비(73.4%), 자동차 및 트레일러(72.4%) 등 4개 업종을 제외한 16개 업종이 70% 미만의 낮은 가동률을 보였다. 특히 가죽·가방 및 신발(59.2%), 비금속광물제품(61.1%) 등은 더욱 낮은 가동률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자금사정 갈수록 악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협중앙회가 4백23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자금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기업의 68.1%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원활하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자금사정 곤란원인으로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 원자재파동이 66.4%로 가장 많았고 매출 감소, 판매대금 회수지연, 납품단가 인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 호전시기로는

전체의 51.7%가 "올 하반기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14.4%는 "2005년 하반기이후"로 전망해 당분간 자금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월과 2월중 중소기업들이 판매대금으로 어음을 받은 비중은 46.5%로 작년 4/4분기보다 2.0%p 상승했다. 판매대금 회수기일도 평균 1백35.7일로 작년 4/4분기보다 5일 길어졌다.

공장신설 중소기업 사전환경성검토 비용지원

앞으로 창업 중소기업들은 공장설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비용을 최고 35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창업대행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지원항목에 사전환경성 검토 비용을 추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지원을 받아 공장을 새로 설립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대행 용역비를 건당 35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환경성검토는 1만㎡ 이상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반드시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로 약 2천만원이 소요돼 창업 중소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창업절차 대행에 대한 용역비 지원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공장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는 350만원, 1만㎡ 이하는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지원업체 수도 작년 90개에서 올해 200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감사원도 중소기업 살리기 나섰다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데 주력해온 감사원이 이번엔 중소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감사원은 최근 각종 규제와 정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기업불편신고센터'를 감사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 등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최근 기협중앙회 1층에서 전운철 감사원장과 정·관·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불편신고센터 현판식을 기졌다. 전운철 감사원장은 이날 "최근 국내 경제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행정기관들은 창업, 공장설립, 사업 인·허가 신청 등 기업관련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해 기업이익을 꺾고 있다"면서 "앞으로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이런 부작위 처분을 적극적으로 적발, 감사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감사원장은 "정부 모든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되지 않은 민원들을 의무적으로 대장에 기록하도록 만들어 이를 철저히 감사하겠다"면서 "이번 기업불편신고센터의 설치에 감사원이 기업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기업민원 합동처리반을 편성,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되 필요시엔 민원인과 함께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발전 위한 정책56건 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7대 국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56개 과제를 발굴, 국회·정부 및 각 당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건의서에서 고용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을 현행 시설대체투자에서 신규·증설 투자까지 확대하고 공장설립허가 최소면적 기준(3,000평 이상)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그 운용규모를 향후 5년 간 1만7000명으로 동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30만명으로 설정, 연수취업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각각 15만 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유통 활성화기금' 명목으로 1천억 원을 조성할 것과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유통 활성화 법률'을 제정할 것도 요구했다.

중소기업 정보화에 339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에 모두 339억 원을 지원해 경영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각 사업별로는 경영혁신 및 원가절감에 239억원, 정보화 기반구축에 79억원, 정보화 교육에 11억원, 정보화역기능방지 및 전략적 경영기업 개발과 보급에 10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별,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소속 중소기업이나 성공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사업성과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1일까지 중소기업 소재지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 · 기업은행 영세기업 지원 강화

국책은행인 산업 · 기업은행이 자금난과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30억원, 대기업은 100억원까지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에 비해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업체 당 20억원 한도로 총 1천억원의 '원자재 애로 기업 특별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특히 '원자재관련 애로기업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자재난에 시달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심사팀을 통한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원자재 구입자금이 지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5일제 도입후 신규고용 중기에 1인당 연 600만원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일 이전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은 분기별로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정년퇴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총 1백8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유도 및 고령자 재취업 유도지원책을 확정, 고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이 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한 뒤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분기별로 근로자 1인당 1백50만원씩을 오는 2008년 6월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 수가 30명인 사업주가 오는 7월부터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뒤 근로자 3명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분기에 4백50만원(1백50만원×3명)씩 2008년 6월30일까지 4년간 총 7천2백 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는다. 또한 정년이 57세 이상인 회사에서 정년퇴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뒤 3개월 이내에 재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총3백60만원(5백명 이상은 6개월간 1백8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 20% 증가

이라크전, 사스(SARS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화물연대 파업 등의 악재 속에서도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대비 20% 증가하면서 5년 연속 신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대비 19.6% 증가한 817억 달러를 기록, 총 수출액의 42.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수출액은 지난 1999년 16.3%, 2000년 29.5%, 2001년 1.7%, 2002년 5.7% 각각 증가하는 등 5년째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이 전년대비 29.5% 증가한 168억4천만달러를 기록, 미국을 제치고 2년 연속 최대 수출지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홍콩(59.3%), 대만(37.7%) 등 아시아권 국가로의 수출증가율이 두드러졌던 반면 대미 수출은 3.8% 감소해 아시아권 수출 비중이 지난 2002년 55.1%에서 지난해 58.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쇄물수출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1억4964만달러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외상값 떼여도 보험 보장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매출채권보험제도가 도입됐다. 중소기업청은 "매출채권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전국의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7000개 업체에 9000억원 규모 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어음만을 취급하는 어음 보험과는 달리 외상매출금, 물품공급계약서, 송장 등 기업의 실물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판매대금 회수 부진으로 인한 부도위험이 현저히 감소되고 1차 납품업체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의 매출채권이 안정화되는 등 연쇄부도 방지 효과가 크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하의 제조업을 2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최고 보험한도(10억원)범위에서 손실금액의 85%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개성공단 올해부터 입주

올해 안에 남측 기업들의 북한 개성공단 진출과 생산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남북은 개성공단 1만평 규모 시범단지의 부지조성을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남측 기업들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또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기업 입주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제8차 회의에 참가한 양측 대표단은 지난 3월5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7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고 나흘간의 회담일정을 마무리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착공에 앞서 북측은 이달 중으로 부동산, 광고, 외환관리 등의 공업지구 하위규정과 관리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지장물 철거비용 · 임차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4월부터 시범단지 부지조성 공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